

## 송도·해운대 등 13개 해수욕장 수질 나빠 수영하기 부적합

전국 44개 주요 해수욕장 가운데 송도·해운대 등 13곳의 수질이 해수욕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6일 환경운동연합은 4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 등의 수치를 조사한 결과 인천 송도해수욕장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중문·망상·화진포·울포해수욕장은 최고점인 'A' 등급을 받아 해수욕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인 해역 환경 기준 1, 2등급은 제주의 중문해수욕장 등 31곳이었고 부적절한 곳은 △인천 송도 △기마미 △포항 송도 △심리포 △변산 △해운대 △나로도 등 13곳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수질 상황은 지난 해와 비교할 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초 환경 시설이 취약한 일부 성수기 때 상당한 수준의 오염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7. 7)

## 콜레라균 올해 첫 검출 패류·해산물은 익혀 먹어야

서해안 바닷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콜레라균이 검출됐다.

국립보건원은 지난 5월부터 전국 해안 지역 76개 보건소와 11개 검역소에서 실시한 해수 등 환경가검물에 대한 콜레라균(엘토르 오가와형)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가검물에서 콜레라균 검출은 지난 97년 4월 광주시 서구 하수에서 발생한 것을 비롯, 지난 해 7월과 8월 전남 순천과 인천시 강화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어패류 등 해산물은 충분히 익혀 먹도록 당부하고 각 시·도 해안 지역 보건소는 콜레라 보조 감시 체계를 가동, 설사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특히 해안가 지역 주민들의 경우 관혼상제 등의 행사시에 생선회 등 날 음식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일보 7. 16)

## '보신·쇼핑' 여행 삼가세요 휴대품 검사 대폭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 달 10일부터 9월말까지 해외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8일 이 기간중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국이 잦은 사람 △골프·사냥·보신 관광 등 사치성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 △홍콩 등 유명 상품 세일이 많은 지역을 다녀온 사람 △파세 대상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사람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

해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해 지정 검사대에서 반입 물품을 정밀 검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면세 범위(반입 물품 합계액 4백달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정해진 세액과 함께 20%의 가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동아일보 7. 9)

## 서울시 민원 행정 합격점 수돗물 불만은 여전

서울시민들은 시의 민원 행정 서비스에는 만족하지만 수돗물을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한국갤럽 등에 의뢰해 청소·수돗물· 시내버스·지하철·보건 의료·민원 행정 등 6개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9.6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가 7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63.4점), 청소(62.2점), 시내버스(57.5점), 지하철(56.5점), 수돗물(47.1점) 순이었다.

민원 행정 분야는 공무원의 친절도가 비교적 높은 만족도(73.9점)를 얻었으나, 공휴일 민원 등 이용 편의성은 59.3점에 그쳤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80.1점), 구로구(76.6점), 금천구(76.0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수돗물의 경우 수질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37.0점으로 가장 낮았고, 요금도 51.8점에 그쳤다. 공급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65.2점으로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

(한겨레 7. 16)

## 부동산 분양 광고 허위·과장 많다 심의기구 올 들어 22건 제재

'시세 차익이 확실한 금싸라기' '가격 폭등이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MF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당한 분양 광고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후)는 최근 '상가 등 분양 광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상가 분양 광고 가운데 22건이 제재 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의 제재 건수와 동일한 수치로 두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확정적인 투자 수익 보장, 미래의 재산 가치에 대한 높은 가치 보장, 상권을 실제보다 유리하게 과장, 근거 없는 고령 고객 숫자를 명시, 기존 상가를 비하하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가장 흔한 예가 고수의 보장

이다. 강남고속터미널 지하 상가 광고를 보면 '1천만원대로 역대 권리금 형성' '마진율이 엄청 높아 월 2천만원 이상 올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거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쓰고 있다.

동아라이텔 상가 광고는 '1천5백만원으로 2년 뒤에 5천만 원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37.6%)고 여겨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소비자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가 32.9%, 광고주의 공정 경쟁 실천이 15.8%의 비율을 보였다.

(서울경제 7. 14)

### 비브리오 환자 횡집 상대 승소 횡집 주인에게 배상 판결

횡집에서 회를 먹은 뒤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려 왼쪽 다리를 절단한 환자가 횡집 주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복현 판사는 12일 소모(53·부산시 온천동) 씨가 부산시 동래구 횡집 주인 L씨(54)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횡집 주인은 50%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3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모 씨의 패혈증은 횡집에서 어패류를 먹은 것과

관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평소 신부전증 등의 질병이 있음에도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의 위험이 있는 어패류를 함부로 먹은 과실이 있는 만큼 소씨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씨는 97년 7월말 직장 동료들과 함께 L씨의 횡집에서 생선회 등을 먹은 뒤 다리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 결국 같은 해 9월 말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중앙일보 7. 13)

### 새로 구입한 애완견 7일 내 죽으면 보상

앞으로는 애완견을 샀다가 1주일 안에 죽으면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고쳐 애완견을 샀다가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애완견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판매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용희 국민생활국장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견을 산 지 1주일 안에 질병이 발생해 3일 내 죽으면 무조건 교환해 주는 것으로 돼 있다.

또 1주일 내 사망했는데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매업자가 절반을 물어줘야 한다. 판매업자 책임이 확실하면 100% 보상

한다.

재경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다음달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개정 즉시 시행키로 했다.

(매일경제 6. 29)

### '19세 미만 판매 금지' 술·담배에 표시해야

오는 9월 10일부터 모든 술·담배에 '19세 미만 판매 금지' 표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19세 미만 판매 금지 표시제를 상표 변경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사전 통보 절차가 늦어져 9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그러나 9월 10일 시행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중앙일보 7. 12)

### 표시 금액 60% 이상 사용하면 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반환

오는 9월부터 상품권 표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고객에게는 잔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 세일 기간에도 상품권 사용은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상품권의 사용 기간은 최소 1년(물품 상품권은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상품권의 사용 제한은 발행업자가 상품권에 미리 기재한 물품이나 매장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고 세일 기간에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개정 상품권 표준약관을 시행,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7. 14)

### 신용카드 '한 장이면 OK' 9월부터 가맹점 공동 이용

9월 1일부터 한 장의 신용카드만으로도 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회원들의 신용카드 파다 소지로 인한 도난·분실 위험이나 이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카드 가맹점의 통합 관리로 불법 현금 유통이나 세금 탈루

를 위한 매출표 유통 등의 카드 불법·변칙 거래가 줄어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은 카드 가맹점을 공동 이용할 경우 회원들이 편리해지고 카드 업체와 가맹점의 관리비용 절감으로 수수료 인하도 예상된다.

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 제도에는 7개 전업카드사와 20개 은행카드사, 이들 카드사의 가맹점 4백70만개가 참여한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개별 카드사의 내부 전산 개발을 끝내고 다음달까지 가맹점 공동 이용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를 마치고 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씨·국민·LG·삼성·외환·다이너스·동양 등 7개 업체가 발행한 카드수만도 작년말 현재 4천60만장에 이른다.

(조선일보 7. 9)

### 현대 차 8천대 자발적 리콜 엑센트 등 고무 제품 결함

현대자동차는 오는 19일부터 엑센트 등 일부 차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현대는 이번 리콜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생산된 일부 승용차의 자동 변속기 내부 부품 중 협력업체에서 공급된 소형 고무 제품의 탄성력 저하로 인한 오일 누유 가능성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종은 해당 기간에 생산돼 국내 판매된 엑센트와 아반떼·구형 티뷰론·다이너스티·싼타모, 그리고 현대가 제작해 기아자동차가 판매한 카스타 등 7천9백88대이며 무상 점검 기간은 19일부터 1년간이다.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가까운 현대차 직영 애프터서비스 사업소나 지정정비공장(3급 부분정비업체 제외)에서 점검을 받으면 된다. 카스타 소유자는 기아차 직영 애프터서비스 사업소나 지정정비공장(3급 부분정비업체 제외)에서도 점검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대상 고객에게 자발적 리콜 사실을 개별 서면 통지하고 대상 승용차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부품을 무상 교환해 줄 예정이다.

무상 점검에 대한 문의는 전화 080-600-6000(현대차) 또는 080-200-2000(기아차).

(한국경제 7. 17)

### 시중 도시락 거의 유통 기한 넘겨 식약청 6개 회사 위생 점검

도시락의 유통 기한을 제멋대로 연장해온 도시락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3일 동안 편의점·대 학교 매점·시립도서관 등에 김밥·샌드위치·햄버거 제품을 공급해온 6개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소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시·도에 이들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 업소가 생산한 29종 3천1백22개 불량 제품을 압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광주군(주)우신산업은 LG25, 바이더웨이 등 서울·경기 지역 편의점 1백30개소에 김밥·샌드위치 등 9종을 납품하면서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 기한을 김밥은 17시간, 샌드위치는 26~29시간이나 임의로 연장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에덴식품이 건국대·경희대·고려대 등 대학 매점과 나인투파이브 공항점 등 편의점에 납품해온 도시락·샌드위치 등 4종은 유통 기한을 최고 54시간30분이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 지역의 LG25, 세븐일레븐, 훼밀리마트, 미니스탑 편의점 전 점포에 김치주먹밥 등 10종의 도시락 제품을 납품해온 경기 광주군(주)탑술도 유통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20~28시간을

연장시켜 왔다. (서울경제 7. 9)

### 공항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추진 소음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민과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공항 소음 피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기를 상대로 소음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대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옆사람과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동안의 정부 대책은 극히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국제 기준보다 10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가 사용하는 항공소음측정단위) 이상 느슨한 항공법상의 소음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선 사례가 드문 공익성 환경 소송으로 김포공항 주변 15만여명을 포함해 국내 14개 공항 주변 지역 주민 30만명 이상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대규모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평소 80 WECPNL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강서·양천구와 경기 부천·김포시 주민 1백여명을 모아 이달말까지 소송을 낼 방침이다.

(동아일보 7. 8)●

## 감사의 글

얼마 전 다이옥신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벨기에산 돼지고기 파동으로 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양돈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 국소비자보호원에서 국산 돼지고기와 벨기에산 돼지고기

의 다이옥신 잔류량을 신속하게 분석·보도함으로써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해주고 소비자들의 국산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켜 준 것에 대하여 전국의 양돈 농가를 대표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양돈협회)